

STUDY CARDS

MADE IN KOREA

6 mm line

Mookeuk note is manufacturing
these note books with best
quality paper and printing.

MK-008



862-0001, 0002

1
의장, 그리고 민주자유당 의원 여러분!

다른 법도 아닌 사회복지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주자유당이 아동과 여성을 위한

탁아문제에 까지 힘의 논리를 앞세워

각계의 다양한 제언과

종속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14일,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올바른 략아 정책 과 탁아입법을 위해

평민당안으로 할것이나, 민자당안으로 할것이나 가

아니라 두당의 안을 종합해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심의를

민자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2일 보사위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보사부의 한 관료는

99%가 민자당의 택이법안을 찬성하고

단지 1%만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여론에 귀가 어두울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사위 단일안이 결렬된 채
민자당안의 단독수정안이 상위에서 표결 처리된
지난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학계, 여성계, 민간이해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되었으므로
탁아입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위에서 표결처리된 후 16일에는
노총을 비롯하여 여성계와 민간탁아소 관계자,

그리고 부모들이

영유아보육법 상임위 통과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앞까지 와서
시위를 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안 처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기 위해 동 조선일보 사설을
몇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탁아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정,
평민당도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상충하고 있지만
정부에도 입장의 상충이 있다」

「탁아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깊은 불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탁아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이다.
그 때문에 학계, 여성계,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야당의 상이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회가 앞장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법률안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고 조선일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자당 의원 여러분!

이것을 1%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평화민주당이 택아복지법안을 발의한지
1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민자당이 대안을 발의하였다면

좀더 결연한 자세로 여권을 수렴하면서

진지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여야 합의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2일과 13일. 날씨는 이틀이지만
소위원회에서 실제로 법안을 심의한 시간은
겨우 대여섯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 심의도 민자당만 보다 1년이나 먼저
포경민당이 발의한 탁아복지 법안과

민자당이 발의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한번 독회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13일의 소위에서 1 독회가 끝난 후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평민당의 탁아정책과 민자당의 탁아정책에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으니

우선 이것부터 토의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당과 정부는 단 한가지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3

지난 14일 상임위에서 민자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아가 교육인지, 복지인지 아직도 논란이 많다"

"여야간에 시각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부처간에 이견 조정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스스로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가 있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자당은

평민당이 동의한 국회에서의 공청회 안건마저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오는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법안에 다 반영하느냐"

"그 반대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하면서 부절처리 하셨습니다

소위에서는 평민당의 시각차이 조정을 반대하였으므로
평민당의

✓ 상임위에서도 계속 토론해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의했었지만

민자당측은 표결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민자당이 수정동의한 영유아보육법안은
찬성 열두, 반대 넷으로 가결이 되었을 때,
저는(본 의원은)
정치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아닌데
힘으로 밀어부치면 된다는 사고에 젖어있는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다수는 힘이 없는 소수보다
열배, 백배 해롭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결이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때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해가기
그래도 안되면 표결로써
차선을 찾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자당은
충분한 심의를 반대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반대하고,
상임위원회의 토론도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며
여당이 주장하는 대화와 타협이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이 법안 발의자는 여론수렴을 이미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여론수렴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이곳 저곳 여러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는 것인데

듣기만 하면 뭐하니까?

반대의견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설득하든지 해서
상대방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로 여론수렴 아닙니까?

평민당이 1년전에 발의한 탁아복지법안도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동안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지난달에 제출한 민자당의 대안과 함께 심의할 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다려온 것입니다.

평민당은 1년을 기다렸는데
민자당은 다음 입시국회까지 한달도 못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의 말대로, 혹시 민자당이
 내년 봄 지방의회 선거 때문에
 이렇게 법안통과를 서두르는 것이라면
 이것은 고야말로 아이들의 탁아문제 까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아니면 어떤 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관계부처간의 영역 다툼으로서
 보사부가 탁아행정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입니까?

그도저도 아니라면

현행법도 있는 마당에 탁아에 관련된 **법령**은
법안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각계가 제기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당이 수정동의한 영유아보육법안
제17조 제3항의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육아시설에 관한 규정,
그리고 시행규칙 제5조의 육아시설 운영규칙의
신고에 관한 규정과 정면으로 상충합니다.

직장탁아소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굳이 노동부에서 보사부로 이관하려면
노동부와 보사부간의 사전협의도 필요하지만
국회 노동위원회의 사전협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지만 타상위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일부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법을 만들면서
관련상위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24
직장탁아소의 관리운영을 보사부로 일원화하는데
반대하는 여론은

그것이 직장탁아소의 설치와 운영을 오히려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등

직장탁아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탁아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시장, 군수보다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것이
직장타아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간가정탁아소에 대한 지원육성문제입니다.

민자당의 수정안 부칙 제5조는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민간가정탁아소들에게

시설과 종사자 기준을 갖추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육성방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3만 2천 개의 탁아소를 ²⁶⁷설치하는
95년까지는, 민간 가정탁아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탁아활동을 육성하고,
일정한 시설과 종사자 기준을 갖추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탁아정책입니다.

정부는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탁아문제에 관해서도 어떠한 정책이나 실천계획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탁아소가 없어 도시에서는 집에서 놀던 두 아이가
불에 타 숨지고,

농촌에서는 밤에 물리거나 농약을 잘못 마셔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맛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수도 82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모두 돌보려면
3만2천개의 탁아소가 필요하다고
보사부는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은, 불과 6백5십개의 탁아소를
위해 2백3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들 천여개의 민간가정탁아소 지원을 위해서는
단 한푼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원하지 않는냐고 보사부에 물으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마땅한데도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안 제 22조는
대통령령에 이것을 위임해서
행정패권의주의로 악용할 소지를 여전히 남겨놓았습니다.
현재 절대부족인 탁아소수를 감안한다면
기준에 미달하는 민간가정탁아소들이
일정한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에
지원규정을 명시해야 하는데 민자당은 이것도

반대했습니다.

셋째, 탁아소의 교육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자당 의원들^도 탁아문제가 교육인지, 복지인지
논란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탁아문제가 교육문제라면 문교위원회가
이 법안을 다루어야지

왜 보사위원회가 다루었습니까?

그런데도 민자당이 수정한 영유아보육법안 제 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제 10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 14조 보육시설연합회,
제 18조 보육내용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교육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오히려 현실을 무시하고 민간탁아소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80년 5공화국 출범당시 이순자씨가 주도했던
새마을유아원 정책의 전철을 밟아서
택아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큼니다.

그래서 평민당은 이상과 현실을 다함께 조화시켜
이것을 한시적인 노력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민자당은 반대했습니다.

민자당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단적으로 지적해서 택아를 필요로 하는 층의 특성은
도시아파트 지역, 도시서민지역, 도서지구,
농어촌 벽지, 직장 등 다양한데 반해

민자당 법안은, 택아시설을 획일적으로 만들려는데
문제가 있으며,

택아의 필요가 크게 비해서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아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간섭하고, 규제일변도의 법안이라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난 16일자 한겨레신문 8면을 보면

「국회보사위에서 14일 민자당의 찬성만으로 통과된
영·유아 보육법안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법과는 거리가 멀다」

「내년초 임시국회로 제정이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던
택아임법이 민자당의 강행방식으로
12, 13일 이틀동안 졸속심의를 거친 뒤,
14일 회기 첫 날치기 통과를 기록하며 만들어졌다」

「여성단체연합의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는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이 행정편의적인 인허가제정과
보육위원회 설치로 인한 획일적인 통제가 강화됐을 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회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공동육아와 미래의 어린이를 걱정하는 모임도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이, 지원은 적고
간섭·규제가 많으며,

시설기준, 운영,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할 것,

택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선언으로만 처리하고

시설의 인·허가, 취소 등은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사회 택아소연합회 소속 택아소들도

현재 빈민지역에서 실질적인 택아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택아소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아보육

법은

진정한 복지법이 못된다고 반대했다」

이밖에도

「탁아행정의 보사부 일원화를 반대했던

YWCA, 한국부인회, 노총을 비롯해

유아교육학회, 전국유치원 교사협의회 등도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연말여성계에 영·유아보육법 반대 운동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반대여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자당의원 여러분 !

이렇게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하실 생각입니까 ?

민자당의원 여러분도 사회복지에 여.야가 어디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당 시절에 여야가 모두
노인복지법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야3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표결처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의는 모두 88년에 하고
1년 동안의 충분한 심의와 수정을 거쳐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시킨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탁아법만은

충분한 심의도 반대하고, 공청회도 반대하고,

상임위에서 토론까지 반대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까?

여당의원 여러분은 지난 11월 초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만면도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으실지 같습니다.

만면도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마치 전쟁하듯이
가습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민자당이 불과 한달전에 발의한 법안을
대여섯시간 심의하는 척하다가
다수의석의 힘만 믿고 표결로써 통과시킨다면
행정부나 입법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여론이 아직도 있고,
그것도 여성계, 유아교육계, 탁아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에
거의 모두 반대하고 있으니
앞으로 한달동안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내년 1월 말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탁아법안을 제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